

'토종생강 연계 스토리텔링 필요'

전북도 생강산업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서 제안
"국가농업유산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
정책적인 지원 시급해"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생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연평균 생강 재배면적은 '80년대 전국대비 35%에서 30년이 지난 지금 17.9%로 반 토막으로 떨어졌다. 최근 중국산 수입 생강의 증가로 수요가 허약되면서 가격 이 폭락해 재배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날 두세훈 의원은 "특히, 완주 봉동은 국내 최초 생강 시배지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경북 안동과 충남 서산에 자리를 내주고 있어 과거 명성을 되찾고 생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농업기술원 김치선 과장은 전북지역 생강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지난 26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생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계획을 제시하며 "중장기적으로 생강 근관부 환경 개선 및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지역 특산 브랜드 개발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대학교 송춘호 교수는 "생강은 벼농사 대비 3배가 넘는 고소득 작목으로 수도작 대체작목이나 고품화에 적합한 품목이다"며 "봉동생강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생강 생산유통조직을 구성하고, 토종생강을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체험관광,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회자로 나선 완주생강연구회 김용희 회장은 "생강 연작피해 예방을 위한 재배기술 연구와 생강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차광막 등 시설 지원"을 요청했다.

(사)완주생강보존위원회 이용국 위원장은 "지난 2019년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국가농업유산과 토종생강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제안했다.

덧붙여 (주)봉동생강마을 조성진 대표는 "생강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연작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생강 관련 교육을 실시해 생강 재배 기술을 표준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정읍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완주, 정읍, 김제, 익산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생강이 기후변화,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전북 생강산업이 제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내정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통의 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도 위촉했다.

박 심임 위원장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를 역임하고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로 재직 중인 북방 정책 전문가다.

박 대변인은 "북방경제 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북방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확대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신북방 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청소년 정책, 당사자가 참여토록"

박용근 도의원,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군)이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384회 임시회에 대표발의 했다.



위촉과 임기등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또한 명확히 했다.

또한, 위원회의 개최를 의무적으로 연4회이상 개최하도록 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참한 자의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이번 정책이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청소년이 반드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고, 어른들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가 청소년들의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부동산 의혹 수사해 달라"

윤희숙 의원, 부친 관련 검찰에 고발돼
"농지 개발정보 접했을 가능성 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윤희숙 의원이 업무차리 중 부친이 취득한 농지 관련 개발정보 등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제부장씨 역시 A씨의 농지 취득 약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는데 이는 부친 내 주요 자료 및 정보 등을 습득해 정관 업무를 보좌하는 직책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 등이 취득 농지 관련 개발정보 등을 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체 공익 목적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의원 부친의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으로 이번 조사 결과 명단에 올랐다. 윤 의원은 개입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의 사퇴와 함께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땅이 윤 의원이

과거 KDI에 근무할 당시 KDI가 연구용역을 한 산업단지 인근 땅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는 등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2015~2016년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으로 재직했다.

윤 의원의 부친은 지난 2016년 8억 2000천만여원에 세종시 전의역 일대의 논을 샀다. 이후 주변에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 땅값은 5년 만에 10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KDI에 재직했던 윤 의원이나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윤 의원의 제부 장씨가 업무차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또 민주당은 윤 의원이 2014년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아 2억3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의혹을 시인하며 "지금 저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KDI 재직 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위안부 피해자법 철회, 안타까워"

윤미향 의원 "법적 보호, 약자가 의존하는 마지막 수단"

윤미향 의원(비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이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해당 법안이 철회된 것과 관련해 "법안이 철회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을 했는지 훗날 역사는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위안부는 가짜다', '위안부는 매춘부다'라고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윤 의원은 전날 26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역사와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법적 보호는 거짓으로 수모를 당하는 약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역사적 진실이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법체계는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

공격하며,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국정원의 '위안부' 공작 사태까지도 밝혀졌다"고 법안 공동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재근 의원은 수요시위에도 함께해주시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많이 도와주시는 등 그동안 위안부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인재근 의원의 법률안 개정 취지 또한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현행 제7차·3특별법에 서도 희생자 유족, 유족회,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제13조)하고 있고, 5·18민주화운동법도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면서 "해의 사제에서도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증오적 표현을 하는 경우 독일,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안부 피해자법)'이 25일 철회됐다. 인 의원 측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치 않으신다 하셔서 철회했다"며 발의 철회 배경을 전했다. /뉴시스